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1. 제1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 요약

가. 구성

■ 2019. 10. 28.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

- 총 10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임기 1년, 법관 6명, 법원공무원 2명, 변호사 2명)

나. 회부 안건 및 이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

- 2019. 12. 12.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검토 결과 보고 완료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운영 중. 결정 취지를 '2020년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에 포함·배포하여 각 지방법원의 경력대등부 운영에 참고하도록 함

■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 2020. 4. 9.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검토 결과 보고 완료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20. 9. 21.부터 서울동부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시범실시 중. 이후 2021. 2. 22.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실시(관련 예규 개정 포함) 예정

■ ③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 2020. 9. 24.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검토 결과 보고 예정

■ ④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 2020. 9. 24.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검토 결과 보고 예정

2.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①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1995년 소액사건 중심으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19년경까지 영상재판은 매우 예외적으로 실시되었음
- 2020년 초경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일부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2020. 6. 1.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최근 변호사업계 등을 중심으로 민사변론, 형사공판을 비롯해 영상재판 허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가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플랫폼의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
- 반면, 영상재판을 원칙적인 재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일부 확대한 영상재판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함
- 이에 영상재판의 추가 확대 여부 및 확대한다면 그 범위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1995. 12. 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
 - 1996. 2.경 원격영상재판시스템 개통
 -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 인제·양구군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 2001. 4.경 원격영상재판시스템 이용 중단
 - 전용회선 운영비 부족 등의 사유

- 2015. 3.경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논의
 - 일단 증인·감정인 부분 도입하고 변론은 보류
- 2016. 2.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 2018. 6.경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
- 2018. 10.경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논의
 - 영상재판 확대 건의
- 2019. 6.경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영상재판 근거 마련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영상재판의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
- 현행 법률 하에서 가능하고 적합한 영상재판의 범위와 실행방안
 - 영상재판이 적합한 절차와 사건(변론준비절차, 심문절차 등)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 방식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재판 활용 방안
 - 현행 법률상 소액사건, 조정사건에 활용 가능
 - 이를 위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 및 방안
- 법률 개정을 통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민사 변론준비기일 요건 완화, 변론기일 도입 여부
 - 형사 증인·감정인신문 요건 완화, 공판준비기일·심문기일 도입 여부

②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 논의의 필요성

- 현행 인신구속제도에서는 구속단계에서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이 가능함
 - ⇒ 적정한 영장재판이 불가능하고 구속 기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영장재판이 자의적이라는 비판 초래됨
 - 구속/불구속 경계에 있는 사건들의 경우 사안의 차이에 비하여 구속/불구속의 현격한 차이 초래

- 구속/불구속 사이에서 비례성 심사에 따른 다양한 결정 불가능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구속제도의 본질과 현실 사이에 괴리 발생이 불가피함
- 수사단계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일제강점기에 근대 사법제도 도입 시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의식과 실무 관행 형성됨
- 형사사법의 중심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 집중되고, 본안재판은 그에 비하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초래됨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2005. 9.경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구속제도 개선 방안 의결
 - 2006. 1.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함
- 201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논의
 - 조건부 석방제도 재논의 되었으나 합의 불발(2011. 6. 활동 종료)
- 2017. 7.경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논의
 -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논의
- 20대 국회 논의
 - 법률안(장제원 의원 15494호, 조웅천 의원 21884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필요성
-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조건부석방결정 청구 가능 여부
 - 구속청구 시 가능한 판사의 결정과 그 사유(예 : 구속사유 없거나 구속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 결정/ 석방조건으로 구속 대체 가능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건부석방결정/ 그 외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결정)
 - 조건부석방결정 시 부과할 석방조건의 종류와 내용

- 조건부석방 결정이 제한되는 사유(예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 받고 있는 때) 등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정보 자체가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 이를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미리 파악하여 압수대상을 특정하거나 현장에서 관련성 여부를 판별하여 압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의 신설과 대법원 2015. 7. 16.자 2011도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 영장 제시, 압수방법 제한, 당사자 등의 참여 및 이의 보장, 무관정보 폐기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2011년 법원행정처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완료
 - 합리적인 압수 범위, 방법 설정과 증거조사에서의 동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함
- 2015. 4.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세미나에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개선방안 논의
- 2015. 5. 권역별 영장법관 간담회에서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통제방안 논의
 - 서울중앙지법 2015. 8.부터 영장 실무 개선방안 시행(압수 대상이 전자정보임을 명시,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및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의 폐기 명시, 영장에 첨부하는 별지 수정 등)
-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개선방안(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대상과 요건, 전자정보 압수 방법 등의 사전적 제한) 포함

- 2020. 7. 권역별 영장법관 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양식 개선 및 영장 사본 교부 방안 논의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심리수단 마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입법 전 개선 가능 여부와 필요한 경우 규칙 개정안 마련 포함, 이하 같음)
- 압수·수색영장 양식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 압수·수색영장 집행방법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압수대상 정보의 명칭, 형식, 용량 등 상세목록 교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배제 사유 구체화 등
-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통제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판사에게 압수목록(또는 압수물) 제출, 무관 압수물 폐기·삭제의무 강화 등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3. 제1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 요약

가. 구성

■ 2019. 10. 28.자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

- 총 13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임기 1년)(법관 7명, 법원공무원 1명, 변호사 3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1명)

■ 2020. 3. 5.자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위원 2명 개임

- 2020. 3. 5.자로 위원 2명의 사임에 따른 해촉 및 신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 실시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나. 회부 안건 및 이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 순위

- 2019. 12. 12.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2020. 4. 9.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검토 진행상황 각 보고
- 2020. 9. 24.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최종 연구·검토 결과 보고 예정

■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제도화 방안

- 2019. 12. 12.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국고부담 제도화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보고 완료
- 2020. 6. 11.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국고부담 예규제정안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보고 완료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화 하는 내용으로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고(2020. 6. 26. 시행),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가 제정됨(2020. 8. 31. 시행)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판결문제공서비스 개선방안

- 2019. 12. 12.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 2020. 4. 9.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최종 연구·검토 결과 보고 완료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현재 점자판결문 등 판결문제공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대상 기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을 선정하였고 2020. 9.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개시 예정임

4.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오늘날 분쟁의 양상이 고도화·복잡화되고 있고, 각종 전문 분야에 관한 분쟁은 그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지식 외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법원은 지금까지 사건처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법원 설치(특허·가정·행정·회생법원), 각종 전담재판부 설치,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와 더불어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이를 통하여 ‘좋은 재판’에 기여하는 전문법관 제도(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법관은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유일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제1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전문법원 추가 설치 및 우선순위’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전문법원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전문법원 설치와 더불어 법관의 인적 전문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참고] ‘전문법원’ 안건과의 차이점
- ‘전문법원’은 사물관할, 관할집중 등 물적 전문화의 관점이고, ‘전문법관’은 법관의 인적 전문화의 관점임
 - ‘전문법원’은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이 전제되는 것인 반면, ‘전문법관’은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

■ 관련 현황 및 기존 논의 경과

●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전문법관은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유일함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은 2005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으로 선발되면 각 권역의 가정법원(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 근무하면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함
-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사건 처리, 관련 절차나 제도 개선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형사전문법관 제도 도입 추진 건의

-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민·형사법관 분리 및 전문화」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단기적으로는 인사이동의 최소화 및 사무분담의 장기화, 직무연수 및 직무연찬의 강화 등을 통하여 법관이 형사재판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형사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형사전문법관의 도입」안건 제안

-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형사전문법관의 도입」안건이 제안되었는바, 제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의 도입으로 가사재판의 전문성 향상과 절차의 개선을 이루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하자는 취지였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사·소년전문법관에 더하여 전문법관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예시: 형사, 의료, 건설, 노동 등)

- 전문성 정도가 크면서도 선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적은 분야를 우선 선정할 필요

● 추가적으로 도입할 분야의 전문법관 활용 및 운영방안

② 민사재판 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에 따른 법관인사시스템의 변화

- 상당한 법조 경력을 쌓은 뒤 임용되는 경력법관들을 단독판사로 보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함
-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관 경력이 전반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이 많은 단독판사에게 지금보다 무거운 사건(현행 합의사건)을 맡기는 것에 대한 양해 내지 공감대 형성 가능
- 배석기간의 장기화, 단독부장판사의 증가 및 대등재판부 운영 등 법조일원화에 따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사패턴에 대응할 필요

● 1심 재판부 증설 및 재판인력 보강을 통한 심리여건 개선

- 사건을 충실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부 수를 늘려 재판부당 사건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 법관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독재판 확대를 통한 재판부 증설이 현실적인 심리여건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 단독 vs 합의사건의 분류기준 재검토 필요

-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구분하여야 한다면 현행 소가 기준보다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사회적 중요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 단독재판을 확대한 외국의 사례도 있으므로, 그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관련 현황 및 기존 논의 경과

● 2015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사사건의 합의관할의 기준이 되는 소가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였음

-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합의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전체적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였음

- 사물관할 조정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은 1심 재판의 원칙적 단독화로 검토되었으나, 이는 '1심 집중' 등을 통한 민사재판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관할의 소가를 인상하는 선에서 제도의 변경을 추진하였음

●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심 단독재판 확대」 안건 의결

- 2019. 12. 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사단독재판 범위의 확대를 촉구하는 안건이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

○ 대법원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1심 단독재판을 확대하고, 소가·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사회적 중요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재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심 단독재판 확대 의안의 구체화」 안건이 제안됨

- 1심 민사단독재판을 확대하자는 원칙 선언을 넘어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과 1심 단독화 확대에 따른 사무분담의 원칙 등 실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취지
-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연구·심의를 거쳐 2020. 12.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민사재판 1심의 단독관할 확대 추진 여부 및 추진할 경우 시행시기
- 단독관할을 확대할 경우 단독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보완방안의 검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결문공개, 변호사평가 외에 변론 전면녹음 등 보완방안을 추가로 채택하여 시행할지 여부 등
- 단독관할 확대의 구체적 방안
 - 1심 사물관할 구분 기준에 관하여 소가를 조정하는 방안, 단독사건의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 사건의 난이도 또는 중요도 등 새로운 구분기준을 도입하는 방안, 재정합의·재정단독 결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
-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항소심 관할의 배분 방안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나뉘어 있는 항소심의 관할 배분 기준에 관한 검토